

항만구역 내 출입통제구역 지정 · 운영 매뉴얼

2024. 1.



해양수산부

Contents

제1장 일반사항	1
제2장 출입통제구역 지정	7
제3장 안전시설물 설치 · 관리	19
제4장 단속 및 과태료	29
제5장 참고자료	47

「항만구역 내 출입통제구역 지정·운영 매뉴얼」 제·개정 연혁

- 이 매뉴얼은 「항만구역 내 출입통제구역 지정·운영 매뉴얼」로 제·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구분	주요 내용	제·개정 (년.월)
항만구역 내 출입통제구역 지정·운영 매뉴얼	· 출입통제구역 지정·운영 매뉴얼 제정 · 일반사항, 출입통제구역 지정, 안전시설물 설치·관리, 단속 및 과태료, 참고자료를 수록	제정 (2020.07)
항만구역 내 출입통제구역 지정·운영 매뉴얼	· 기능별 역할에 출입통제구역 지정과 관리·운영을 분리하고, 출입통제구역 지정변경과 해제 공고문 추가, 표지판 근입깊이 내용 변경 등 내용추가	개정 (2021.12)
항만구역 내 출입통제구역 지정·운영 매뉴얼	· 출입통제구역 시인성 확보를 위한 안전시설물 설치를 확대하고 출입허가 신청서 양식 추가, 관련 법령 현행화 등	개정 (2024.01)

제 정: 2020년 7월 16일	개 정: 2024년 1월
소관부서: 해양수산부 항만기술안전과	
관련단체(작성기관): 한국항만협회	

제1장

일 반 사 항



제1장 일반사항

1 개 요

이 매뉴얼은 항만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에 출입통제를 위해 필요한 사항과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기 위함이다.

항만구역 내 출입통제구역에 대한 지정 및 관리 · 운영에 적용한다.

● 「항만법」 제28조(금지행위 등) 제2~5항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구역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대하여 출입통제를 할 수 있다.
1. 항만구역 내 방파제, 호안, 해안가 등 파도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장소
 2. 화물차량, 하역장비 등이 이동하거나 작업하는 장소
 3. 그 밖에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장소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출입통제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간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공고하고, 정보통신매체를 통하여 이를 적극 알려야 한다.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출입통제 사유가 없어졌거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즉시 출입통제 조치를 해제하고 제3항에 따른 공고 등을 해여야 한다.
- ⑤ 출입통제의 공고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28조(금지행위 등) ·제104(권한 등의 위임 · 위탁) ·제113조(과태료)	·제93조(권한의 위임) ·제96조(과태료의 부과 기준)	·제23조(출입통제구역의 지정)

② 「항만법」 제28조제2항 시행의 이해

항만구역 내 방파제, 테트라포드 등에서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여 인명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생명 · 신체를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만법」 개정으로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항만구역 내 방파제, 호안 등의 장소에 출입통제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고, 제반 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법적 · 제도적 통제 장치를 마련하였다.

● 추진 경과

추진 경과

- ‘19.5.21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 대표 발의
- ‘20.1.29 「항만법」 개정(제28조제2항~제5항 신설)
- ‘20.7.30 「항만법」 시행

③ 기능별 역할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등에 따른 기능별 역할은 다음과 같다.

● 해양수산부

☞ (법 제도 정비) 법 개정, 지정 · 운영 매뉴얼 작성 등

○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

☞ 출입통제구역 지정

- 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
- 시·도지사

☞ 출입통제구역 관리·운영

- 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
- 항만공사
- 시·도지사

☞ 안전시설물 유지관리 및 보수

- 지방해양수산청 항만정비과, 항만건설과, 항만물류과
- 항만공사
- 시·도지사

☞ 과태료 부과·징수

- 지방해양수산청 부과(항만물류과), 징수(운영지원과)
- 시·도지사

☞ 관계기관 협력체제: 합동 단속 등

- 관할 지방해양수산청 및 시·도지사, 항만공사, 지방해양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서)

* 각 관리기관의 업무분장이 구분된 경우, 각 관리기관의 업무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제2장

출입통제구역 지정



제2장 출입통제구역 지정

① 출입통제구역(법 제28조, 시행규칙 제23조)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구역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에 대하여 출입통제 구역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 지정 대상

- ☞ 항만구역 내 방파제, 호안, 해안가 등 파도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장소
- ☞ 화물차량, 하역장비 등이 이동하거나 작업하는 장소
- ☞ 그 밖에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장소

● 지정 절차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출입통제 구역을 지정하려고 할 때에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의견 조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해양수산청장) 관할 시·도지사, 해양경찰청(서)장, 항만공사 사장, 어촌계 등 지역주민 ✓ (시·도지사)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 해양경찰청(서)장, 항만공사 사장, 어촌계 등 지역주민
↓	
【표지판 및 표시선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 표지판·표시선 제작·설치
↓	
【공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관보 또는 공보, 해당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

* 지정일 30일 전에 ‘출입통제구역 알림 표지판’ 및 ‘출입통제구역 표시선’ (“제3장 안전시설물 설치·관리” 참고)을 설치하고 공고해야 함.

● 공고

[지정]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출입통제구역 지정 30일 전까지 일반인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출입통제구역 알림 표지판’과 ‘출입통제 표시선’을 설치하고, 관보 또는 공보, 해당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 ☞ 출입통제구역의 지정 사유
- ☞ 출입통제구역의 위치 및 위치도
- ☞ 출입통제 기간
- ☞ 위반 시 벌칙에 관한 사항
- ☞ 그 밖에 출입통제구역의 지정과 관련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변경] 출입통제구역을 확대, 축소 등 변경할 때도 출입통제구역의 지정 절차와 동일하게 변경절차를 수행해야 한다.

[해제]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출입통제 사유가 없어졌거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즉시 출입통제 조치를 해제하고 관보 또는 공보, 해당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 ☞ 출입통제구역의 해제 사유
- ☞ 출입통제구역의 해제 위치 및 위치도

● 출입통제구역 지정 · 공고

[예시 1] 관할 인터넷 홈페이지 지정 · 공고

The screenshot shows the website of the Busan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The main navigation bar includes links for '정보공개' (Information Disclosure), '민원바다' (Citizen Sea), '알림소통' (Notification & Communication), '관할항만' (Jurisdictional Port), and '기관소개' (Agency Introduction). The '알림소통' (Notification & Communication) section is highlighted, showing a list of categories: '공지사항' (Notice), '입찰' (Bidding), '인사' (Personnel), '채용정보' (Recruitment Information), '업무계획' (Business Plan), and '구)고시' (Formerly Notice). The '공지사항' (Notice) category is selected, displaying a list of notices. A red box highlights the notice titled '<제주> 2020년 제4회 여객선 선장 적성심사 시행계획 알림' (Notice of the Implementation Plan for the 4th Captain Competency Assessment for Passengers in Jeju, 2020). Below the notice title, a table shows the author (제주해양수산관리단), creation date (2020-07-14 14:25), and number of replies (5). A red box highlights the file name '2020년도 제4회 여객선 선장 적성심사 시행계획 공고(제주해양수산관리단).hwp [미리보기]' (2020 4th Passenger Ship Captain Competency Assessment Implementation Plan Announcement (Jeju Marine & Fisheries Management Unit).hwp [Preview]). A red arrow points from the file name to a blue box containing the following tex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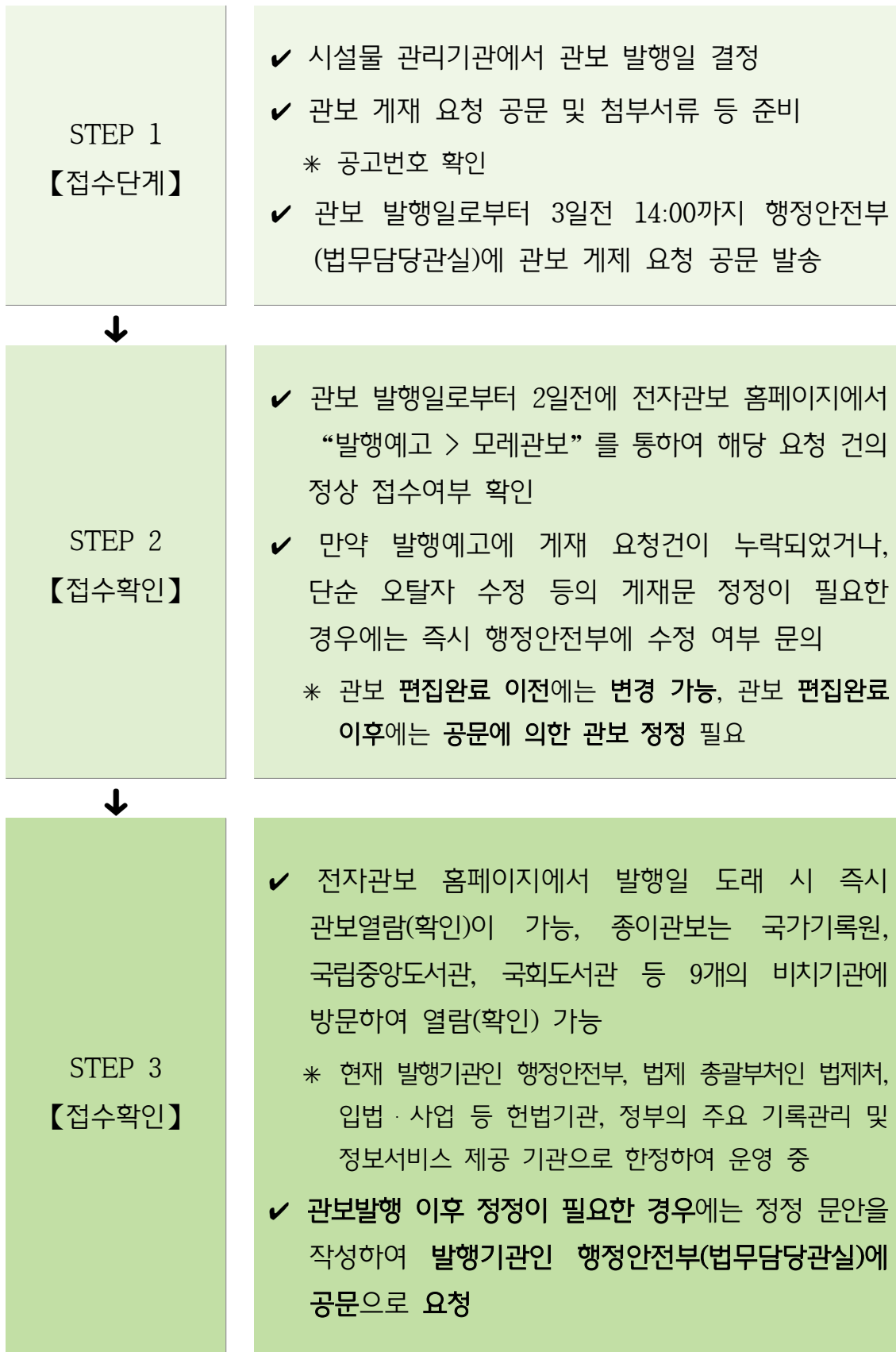
- [붙임 1] 출입통제구역 지정 · 공고문
- [붙임 2] 출입통제구역 위치 및 위치도

[예시 2] 전자관보 지정 · 공고

☞ 게재 요청 및 발행 절차

The flowchart illustrates the process for publishing an electronic notice, divided into three steps:

- [STEP 1] 접수단계 (Reception Stage):**
 - 관보 발행일 결정 (D-3, 14:00 이전) (Determine the date of publication (D-3, before 14:00)).
 - 관보 게재 요청 공문 및 첨부서류 등 준비 (Prepare official notice and supporting documents for publication request).
 - 관보 게재 요청 공문 발송 (수신처: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문서 유통이 안되는 기관은 (gwanbo1948@korea.kr로 송부)) (Send official notice for publication request (recipient: Ministry of the Interior, Legal Affairs Division) (If the document is not distributed to the agency, send it to (gwanbo1948@korea.kr))).
- [STEP 2] 접수 확인 (Reception Confirmation):**
 - '발행예고' > '모레관보' 확인 (D-2일 확인 가능) (Check 'Advance Publication' > 'Tomorrow's Notice' (confirmation possible D-2 days)).
 - 목차 확인하기 > (Check the table of contents >).
- [STEP 3] 확인 및 정정 (Confirmation and Correction):**
 - 발행일 도래시 즉시 열람 가능 (When the date of publication arrives, it can be viewed immediately).
 - 일자별 관보 보기 > (View notice by date >).



[출입통제구역 지정(변경) 공고문]

제 00000호 관 보 20 .00.00(○요일)

◎ ○○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 -00호

「항만법」 제2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항만구역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출입통제구역을 지정(변경) 공고합니다.

20 년 00월 00일

○○지방해양수산청장

출입통제구역 지정(변경) 공고

1. 지정(변경) 대상

- ○○항 ○○방파제 테트라포드 구역
- ＊ (붙임) 출입통제구역의 위치 및 위치도

2. 지정(변경) 사유

- 안전사고(추락, 실족 등) 사례가 빈번한 장소로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

3. 지정(변경)일: 20 . 00. 00

4. 출입통제 기간: 20 . 00. 00 ~ 해제일 까지

5. 위반시 벌칙에 관한 사항

- 근거: 「항만법」 제113조제2항
- 벌칙: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부 칙

이 지정·공고는 20 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1. 출입통제구역의 위치 및 위치도

○ 위치: ○○항 ○○방파제 테트라포드 구역

※ ○○○도 ○○시 ○○구 ○○동

※ ----- 선 이내 지역

○ 위치도



[출입통제구역 해제 공고문]

제 00000호 관 보 20 .00.00(○요일)

● ○○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 -00호

「항만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항만구역 내 출입통제 사유가 없어졌거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다음과 같이 출입통제구역 해제를 공고합니다.

20 년 00월 00일

○○지방해양수산청장

출입통제구역 해제 공고

1. 해제 대상

○ ○○항 ○○방파제 테트라포드 구역

※ (붙임) 출입통제해제 구역의 위치 및 위치도

2. 해제 사유

○ 항만구역 내 출입통제 사유가 없어졌거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출입통제구역을 해제함

3. 해제일: 20 . 00. 00

부 칙

이 출입통제구역 해제 공고는 20 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1. 출입통제구역 해제 위치 및 위치도

○ 위치: ○○항 ○○방파제 테트라포드 구역

※ ○○○도 ○○시 ○○구 ○○동

※ ----- 선 이내 지역

○ 위치도



② 권한 등의 위임(법 제104조, 시행령 제93조)

해양수산부장은 법 제104조제1항에 따라 법 제28조에 따른 출입통제구역 지정 및 해제 공고에 대한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 권한의 위임

☞ 국가관리무역항 및 국가관리연안항: 해양수산부장관 → 지방해양수산청장

* 「항만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 지방관리무역항 및 지방관리연안항: 해양수산부장관 → 시·도지사

* 「항만법 시행령」 제93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 할 수 있음.

③ 지정 시 주요 고려사항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항만구역 내 출입통제구역을 지정하려고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주요 지정요건으로 고려할 수 있다.

☞ 안전사고(실족, 추락 등) 사례가 빈번한 장소

☞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고 예상되는 장소

☞ 안전시설이 없거나 잦은 파손에 의한 무단침입이 빈번한 장소

☞ 이용자(지역주민 등)이 요청하는 장소

④ 지정 · 관리를 위한 타 기관 협조 등

- ☞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시 · 도의 시설물 관리자는 해양경찰청과 주기적인 점검, 합동순찰 및 단속, 인명사고 발생 시 현장대응 등에 대해 상호 협조 요청
- ☞ 출입통제구역에 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설물 관리자의 출입허가를 받아야 함
 - 출입통제구역 출입허가 신청서[별지 제9호서식]에 출입 사유 등을 시설물 관리자에게 제출하고 허가[별지 제10호서식]를 받아야 함

제3장 안전시설물 설치·관리



제3장 안전시설물 설치 · 관리

1 안전시설물의 설치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항만구역 내 출입통제구역에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시설물을 설치·관리할 수 있다.

● 안전시설물의 종류

- ☞ 표지판: 항만구역 내 출입통제구역 지정 관련 공고내용(지정사유, 위치 및 위치도 및 출입통제 기간, 과태료 등)을 표시한 시설
 - * 일반인이 출입통제 정보를 정확하게 인식,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림
- ☞ 출입통제구역 표시선: 항만구역 내 출입통제구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한 선
- ☞ 진입방지시설: 항만구역 내 출입통제구역에 일반인 진입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울타리 등의 시설
- ☞ 구명설비: 해상 추락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 인명구조를 위한 구명환 및 구명로프·구명조끼 등의 설비
- ☞ CCTV(필요시): 출입통제구역 실시간 현황 등의 정보취득 및 무단출입 시, 경보음·안내방송 등으로 위험을 알리는 설비
- ☞ 위험 경고판(필요시): 출입통제구역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T.T.P. 등에 부착하는 위험경고판
- ☞ 로고젝터(필요시): 야간에 시민들에게 위험구역을 알리고 안전한 항만시설 이용을 안내하기 위해 설치하는 LED 조명시설
- ☞ 표지병(로드아이)(필요시): 야간에 안전사고(추락, 넘어짐 등) 예방을 위해 항만시설 난간이나 경계부에 설치하여 빛을 발산하는 시설

● 안전시설물의 제작 · 설치

안전시설물을 설치하려는 자는 항만시설물의 안전시설 설계지침(해양수산부, 2020년)을 준용하여 설치해야 하며, 항내 이용여건이나 해상여건에 따라 일부 조정할 수 있다.

[표지판] 출입통제구역 입구 등 일반인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설치

- * 표시 내용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크기, 색상 및 글자체 사용
- * 야간에도 잘 보일 수 있도록 성능이 우수한 반사 재료를 사용하거나, 조명시설을 장치하여 시인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함.

[진입방지시설] 출입통제구역의 위치, 지정범위 및 진입여건 등을 고려하여 출입문 및 안전웬스(또는 울타리)의 설치위치 및 규모를 결정

- * 내식성, 안전성을 고려한 재질을 사용하되, 진입방지 기능을 확보하는 범위 안에서 주변 경관과 조화되는 디자인으로 설치

[CCTV] 출입통제구역의 정보 취득 및 전달이 용이하도록 설치하며, 통제구역의 지정 범위가 길거나 넓은 경우에도 정보 취득 및 전달이 가능한 간격으로 설치

- * 지주대는 염해에 강한 재료로 제작하여 염해에 의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방수 및 방식처리

[구명설비] 해상 추락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구조할 수 있는 위치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잠금장치 없이 비치하고, 안전시설물 관리자는 구명설비가 구난기능을 상시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

- * 구명설비는 파랑이나 침수로 인한 영향이 없는 곳에 배치하며, 출입통제구역 범위 등을 고려하여 배치 간격을 결정
- * 구명조끼 1개 이상, 구명튜브 1개 이상
- * 구명로프: 지름 10mm 이상, 길이 30m 이상의 1개 로프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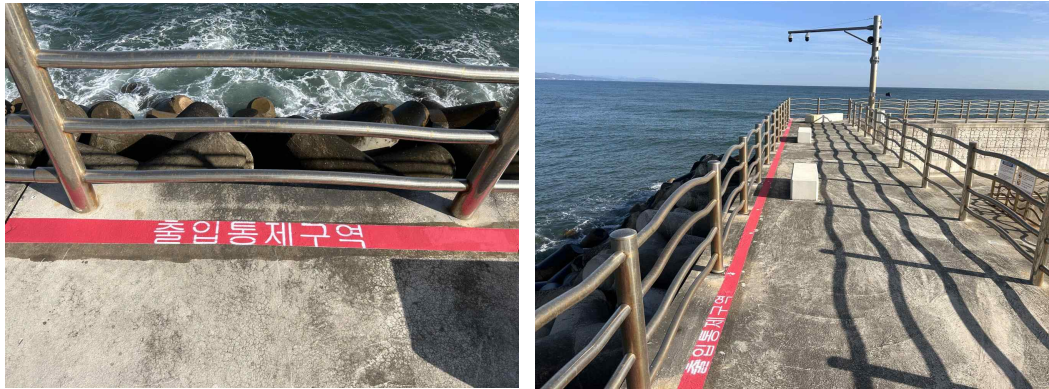
[출입통제구역 표시선] 항만구역 내 출입통제구역을 알기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한 선



- * 표시선의 두께는 20cm, 바탕면 색상은 “빨간색(KS산업규격, 빨강(7.5R 4/14, red))” 으로 시공
- * “출입통제구역” 글자는 “견고딕”, 높이 15cm, 색상은 “흰색” 으로 시공하고 표기간격은 20~50m 간격으로 배치
- * 표시선은 야간에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도장 도료 및 유리가루 재료를 사용해 시공
- * 출입통제구역 표시선 일위대가(참고)

호 표	품 명	규 격	단 위
제1호	출입통제구역 표시선 도색		m ²
	우레탄	투명	kg
	수성페인트	백색	kg
	형광도료	빨강	kg
	유리알	고휘도	kg
제2호	출입통제구역 문자 도색		m ²
	수성페인트	백색	kg

* 출입통제구역 표시선 설치(예)



[위험 경고판] 출입통제구역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T.T.P 등에 부착하는 위험경고판

- * 규격/재질: T.T.P 규격에 맞게 설치/부식되지 않는 재질
- * 고파랑에도 고정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시공하며 글자는 “견고딕”

출입금지	해랑이 추락위험	낚시행위 금지 알림

* 위험 경고판 설치(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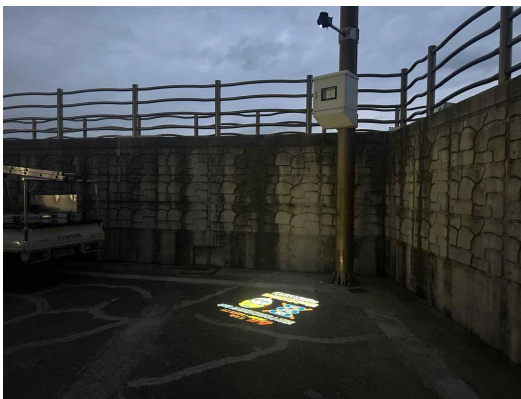


[로고젝터] 야간에 시민들에게 위험구역을 알리고 안전한 항만시설 이용을 안내하기 위해 설치하는 LED 조명시설

- * 밝기: 야간에 시인성이 가능한 밝기로 설정
- * 작동 방법: 일출, 일몰시 자동(On/Off) 작동

1단계(T.T.P 설명)	2단계(위험행위)	3단계(사고시 신고)
		

- * 로고젝터 설치(예)



[표지병(로드아이)] 야간에 안전사고(추락, 넘어짐 등) 예방을 위해 항만시설 난간이나 경계부에 설치하여 빛을 발산하는 시설

- * 표지병(로드아이) 설치(예)

- * 밝기: 야간에 시인성이 가능한 밝기
- * 설치 방법: 매입식 또는 돌출식



② 안전시설물의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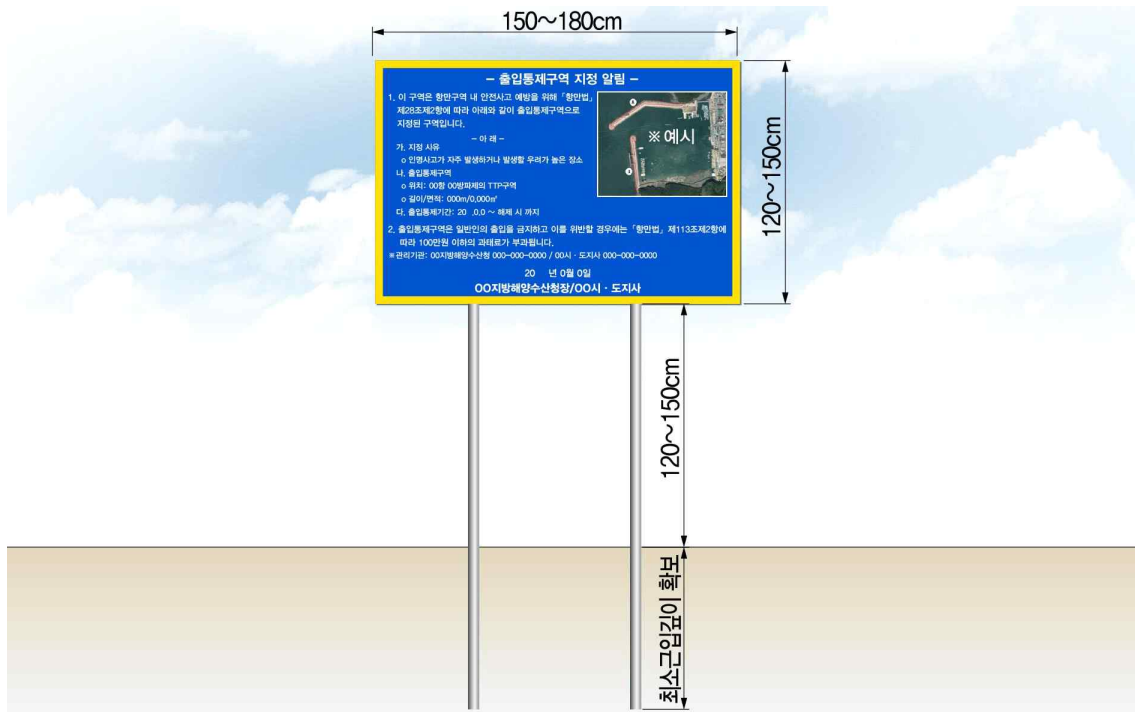
-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 · 도지사는 안전시설물 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 안전시설물 관리자는 시설물이 훼손, 망실 등이 발견된 경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히 보수 · 보강 및 유지보수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표지판 설치기준

○ 제작 · 설치기준

구 분	제작 · 설치기준
재 질 (재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식성이 강한 재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반 환경조건을 고려한 방식공법 및 재질(재료) 선정 ✓ 표지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간에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빛 반사 형광물질 사용
지 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주식으로 이음매가 없도록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상, 해상 등 환경조건을 고려한 안전성 확보 ✓ 하부 기초: 인발에 대한 저항력 및 설치 대상지의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최소 근입깊이를 확보
색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탕 색상: 파란색 ✓ 글자체 색상: 흰색 ✓ 테두리 색상: 노랑색
규격 (크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로 150~180cm, 세로 120~150cm, 높이 120~150c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인성을 고려 규격 결정 ✓ 두께: 3mm 이상의 철판
글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딕 계열로 진하게 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녀노소 이용자 누구나 쉽게 인지할 수 있는 크기
설 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지판의 시인성 확보가 용이한 곳에 설치
기 타 (필요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간에 표지판을 인식할 수 있도록 조명시설 설치(필요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원은 태양전지 등 자연에너지 이용 권고

● 표지판 설치도



● 표지판 내용

- 출입통제구역 지정 알림 -

1. 이 구역은 항만구역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항만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입니다.

- 아 래 -

가. 지정 사유

-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

나. 출입통제구역

- 위치: 00항 00방파제의 TTP구역
- 길이/면적: 000m/0,000㎡

다. 출입통제기간: 20 .0.0 ~ 해제 시 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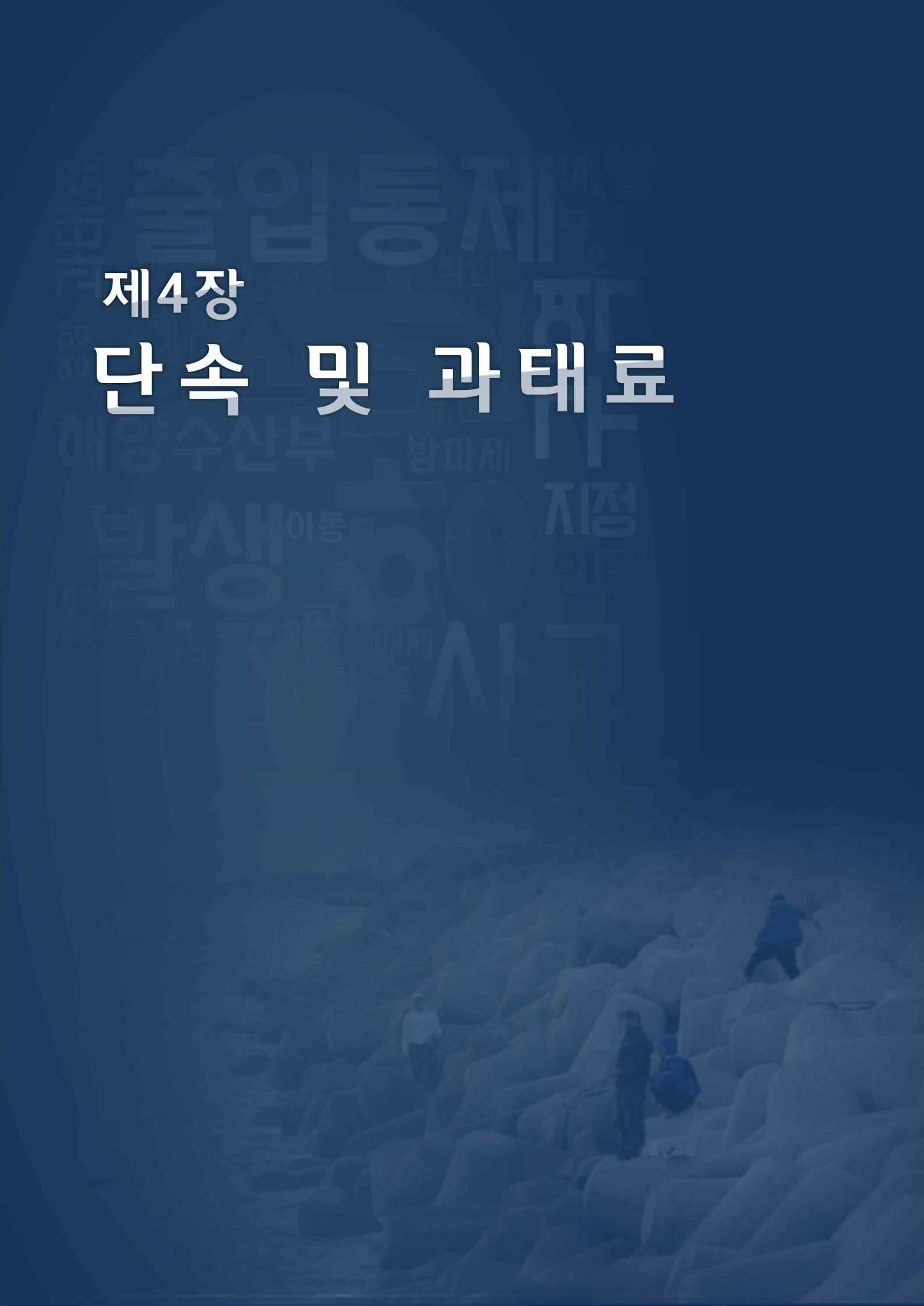
2. 출입통제구역은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항만법」 제113조제2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관리기관: 00지방해양수산청 000-000-0000 / 00시 · 도지사 000-000-0000

20 년 0월 0일

00지방해양수산청장/00시 · 도지사

제4장 단속 및 과태료



제4장 단속 및 과태료

① 과태료(법 제113조, 시행령 제96조)

과태료 개별기준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 (권한의 위임) 해양수산부장관→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

● 과태료의 부과기준 (시행령 제96조, 별표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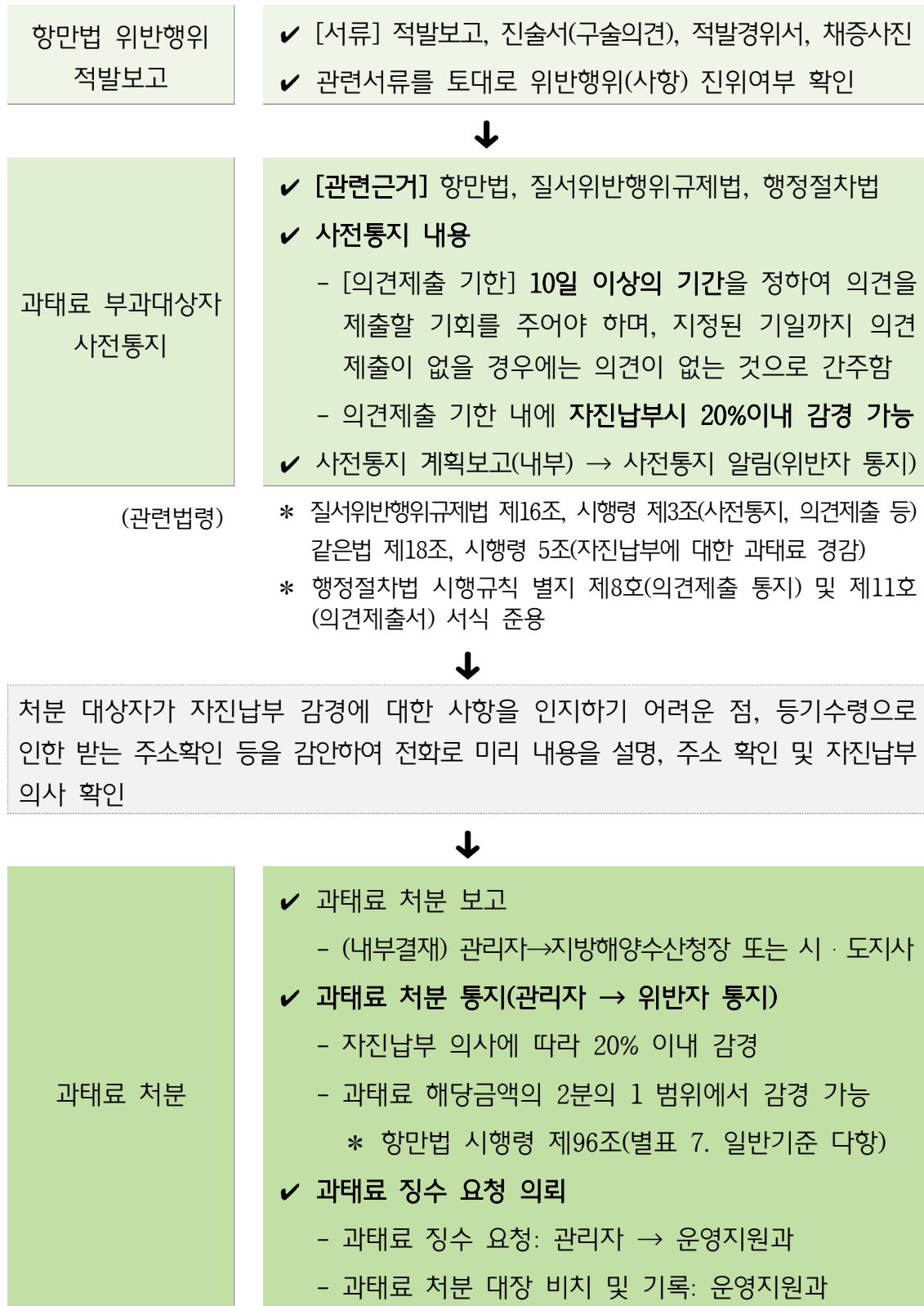
☞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개별기준

위반행위	과태료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나.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출입통제구역을 출입한 경우	법 제113조제2항	20만원	50만원	100만원

○ 과태료 부과 절차



② 단 속

단속은 관할 시설물 관리자 및 지방해양경찰청이 실시하고, 공무 집행방해 등의 경우 관할 지방해양경찰청의 협조를 통해 단속 업무를 수행한다.

필요시에는 관할 지방해양수산청, 시·도지사 및 지방해양경찰청과 합동단속을 수행한다.

③ 서 식

● 【별지 제1호서식】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의견제출 통지)

(1/2)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의견제출 통지)				
문서번호:				
시 행 일:				
수 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기관이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을 사전통지하오니 이의가 있을 경우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주 소			
	생년월일		성 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과태료 금액)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항만법」 제28조(금지행위 등) 제2항 ◦ 「항만법」 제113조(과태료) 제2항			
의견 제출처	부서명		담당자	
	주 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팩스번호	
의견 제출기한 (자진 납부기간)	년 월 일까지			
<div style="text-align: right;">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 · 도지사 <div style="border: 2px solid red; padding: 2px 10px; display: inline-block; margin-left: 10px;">직 인</div> </div>				

<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

1.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 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관리청에 출석하여 의견 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관리청으로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과태료 감경)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감경(50%)을 위한 해당 자료를 기한 내 제출할 수 있습니다.

【대 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 제2항·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미성년자」

※ 단,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감경하지 않음.

5. 과태료를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자진 납부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따라 20%범위 이내로 감경 가능하며, 자진 납부시 해당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됩니다.
6. 자진납부 의사에 따라 감경된 납부 고지서가 통지된 후에 자진납부 의사를 철회할 경우, 부과된 과태료 감경도 철회됩니다.
7.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은 ○○지방해양수산청 ○○○○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TEL 000-000-0000)

36

○ 【별지 제4호서식】 과태료 처분 통지서

(1/2)

제 호				
과태료 처분 통지서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위 사 항	위반법 조 항	「항만법」 제28조제2항		
	위반내용		과태료 금액	
산출근거				
<p>1. 「항만법」 제113조제2항에 따라 상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오니 지정된 기한 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p> <p>2.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p> <p>첨부 1. 과태료 납입고지서 1부 2. 이의신청서(양식) 1부 끝.</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 · 도지사 직 인</p>				

〈 과태료 부과처분 관련 안내사항 〉

1.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관리청(○○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 (별지 제5호서식)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참조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고, 이후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 마다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증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합니다.(증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함)
3. 상기 제1호의 기한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2호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됩니다.
4.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52조(관허사업의 제한), 제53조(신용정보의 제공 등), 제54조(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제재)

5. 기한 내 납부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별지 제5호서식】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신청인	주 소				
	생년월일		성 명		
과 태 료 처분내역	부과기관			납부통지서번호	
	고지받은 일자			과태료 금액	
	과태료처분사유 (위반내용)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사유					
<p>「항만법」 제11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제기하오니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top: 20px;"> 년 월 일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margin-top: 10px;"> 신청인 (서명 또는 인) </div> <div style="margin-top: 20px;">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 · 도지사 귀하 </div>					

○ 【별지 제6호서식】 과태료 처분 검토보고서

과태료 처분 검토보고서

1. 처분 개요

가. 위반일시 및 장소:

나. 위반자 인적사항

◦ 주 소:

◦ 성 명:

◦ 생 년 월 일:

다. 관련법규

라. 위반사실

2. 검토 의견

가. 위반시 행정제재

◦ 근 거:

◦ 행정제재수단:

나. 추진사항

◦ 관련자 출석요구

◦ 사실조사

3. 검토 결과(행정제재)

[illegible]

● 【별지 제8호서식】 과태료 처분 부과 및 수납대장

과태료 부과 및 수납대장

[illegible]

● 【별지 제9호서식】 출입통제구역 출입허가 신청서

출입통제구역 출입허가 신청서				
신청인	소 속		직위 (직급)	
	생년월일		성 명	
	전화번호			
신청내용	출입허가 기간			
	출입허가 사유			
<p>「항만법」 제2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출입통제구역의 출입 허가를 신청합니다.</p>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top: 40px;"> 년 월 일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margin-top: 20px;"> 신청인 (서명 또는 인) </div> <div style="margin-top: 30px;">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 · 도지사 귀하 </div>				

○ 【별지 제10호서식】 출입통제구역 출입 허가서

(앞면)

출입통제구역 출입 허가서

소속	직위(직급)	성명	연락처	출입 기간	출입 사유
00회사	00	000	000-0000-0000	00월 00일 00시~00시	(예)시설물 안전점검

「항만법」 제2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출입통제구역의 출입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 직 인

(뒷면)

< 안내사항 >

1. 출입통제구역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출입이 제한된 장소입니다.
2. 출입통제구역 출입 시 출입통제구역 출입 허가서를 소지해야 하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3. 출입통제구역에서 출입사유 행위 외에 낚시 및 해산물 채취 등의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4. 출입통제구역 출입할 경우, 개인 안전보호 장비를 반드시 착용하고 안전에 유의해야 하며, 고파랑 등 이상기후 발생 시 즉시 출입통제구역에서 나와야 합니다.
5. 허가 없이 출입통제구역에 출입하는 경우 「항만법」 제113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6. 이 허가서는 시설물 관리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내보여야 합니다.
7. 이 허가서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시·도에 신고해야 합니다.
8.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의 직인이 없는 것은 무효입니다.

제5장

참 고 자 료



제5장 참고자료

① 항만법

● 법

[시행 2023.6.28.] [법률 제19140호, 2022.12.27. 일부개정]
해양수산부(항만정책과), 044-200-5920, 5921

제28조(금지행위 등) ①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항만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유독물이나 동물의 사체를 버리는 행위
2. 다량의 토석(土石)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등 항만의 깊이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
3. 그 밖에 항만의 보전 또는 그 사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관리청은 항만구역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대하여 출입통제를 할 수 있다.

1. 항만구역 내 방파제, 호안, 해안가 등 파도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장소
2. 화물차량, 하역장비 등이 이동하거나 작업하는 장소
3. 그 밖에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장소

③ 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출입통제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간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공고하고, 정보통신매체를 통하여 이를 적극 알려야 한다.

④ 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출입통제 사유가 없어졌거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즉시 출입통제 조치를 해제하고 제3항에 따른 공고 등을 하여야 한다.

⑤ 출입통제의 공고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04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협회, 「항만공사법」 제4조에 따른 항만공사, 「한국해운조합법」 제4조에 따른 한국해운조합 또는 「한국수자원공사법」 제2조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3조(과태료) ② 제28조제2항에 따른 출입통제 지역을 출입한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시행령

제93조(권한의 위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4조제1항에 따라 법 제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의 국가관리무역항 및 국가관리연안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22. 법 제2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입통제, 출입통제의 해제 및 공고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4조제1항에 따라 법 제3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의 지방관리무역항 및 지방관리연안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위임받은 권한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1. 제1항제2호부터 제29호까지 및 제34호부터 제5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권한

제9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별표 7】 과태료 부과기준(제96조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나.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출입통제 지역을 출입한 경우	법 제113조제2항	20만원	50만원	100만원

● 시행규칙

제23조(출입통제구역의 지정)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28조제2항 각 호의 장소를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하려는 때에는 그 지정일 30일 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표지판으로 제작하여 출입통제구역 입구 등 일반인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하고, 관보 또는 공보,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시·도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그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1. 출입통제구역의 지정 사유
2. 출입통제구역의 위치 및 위치도
3. 출입통제 기간
4. 위반시 벌칙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출입통제구역의 지정과 관련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법

[시행 2021.1.1.] [법률 제17758호, 2020.12.29. 타법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제1조(목적) 이 법은 법률상 의무의 효율적인 이행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①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제11조제2항에 따른 고용주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당사자는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행정청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은 제2항에 따라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제20조(이의제기) ①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6. 12. 2.>

②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증가산금"이라 한다)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증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 시행령

[시행 2021.2.5.] [대통령령 제31412호, 2021.1.26. 일부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제2조의2(과태료 감경) ① 행정청은 법 제16조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결과 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5. 10., 2018. 12. 3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 제2항·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5. 미성년자

제3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①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행정청이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미리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은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15., 2013. 5. 10., 2021. 1. 26>

1. 당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2.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및 적용 법령
 3.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명칭과 주소
 4. 당사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제출기한
 5. 법 제18조에 따라 자진 납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감경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
 - 5의2.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는 사실
 6. 제2조의2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감경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
 7. 그 밖에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② 당사자는 제1항제4호의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말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그 주장을 증명하기 위하여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 5. 10.>

③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2항에 따라 말로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진술자와 그 의견의 요지를 기록해 두어야 한다. <개정 2013. 5. 10.>

제5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경우 감경할 수 있는 금액은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한다.

③ 항만구역 내 출입통제구역 지정 현황

● 출입통제구역 지정 현황(2023년 12월 기준)

- (지방청) 출입통제구역 지정 현황(33개소)

연번	지역	관리청	항만	시설명	범위	지정일	지정사유
1	강원	동해청	묵호항	북방파제	전면	'20. 9.	안전사고 위험구역
2		동해청	묵호항	제2호선 도크 방파제	부분	'22. 04.	안전사고 위험구역
3		동해청	동해신항	방파호안	부분	'22. 04.	안전사고 위험구역
4	경북	포항청	영일만항	어항방파제	부분	'21. 03.	안전사고 위험구역
5		포항청	포항구항	북방파제(1단계)	부분	'21. 03.	안전사고 위험구역
6		포항청	후포항	동방파제	부분	'21. 03.	안전사고 위험구역
7		포항청	후포항	남방사제	부분	'21. 03.	안전사고 위험구역
8		포항청	영일만항	남방파제	전면	'22. 09.	안전사고 위험구역
9		포항청	포항신항	도제(0.7km)	전면	'22. 09.	안전사고 위험구역
10	경남	부건소	부산항	용호부두 방파제	전면	'20. 12.	안전사고 위험구역
11		부건소	감천항	동방파제 TTP	전면	'22. 08.	안전사고 위험구역
12		부건소	감천항	도류제	전면	'22. 08.	안전사고 위험구역
13		부건소	다대포항	낮개방파제 TTP	전면	'22. 08.	안전사고 위험구역
14		부건소	감천항	서방파제	부분	'23. 02.	안전사고 위험구역
15		울산청	신항	남방파제(1단계)	전면	'22. 03.	안전사고 위험구역
16		울산청	신항	북방파제	전면	'22. 03.	안전사고 위험구역
17		울산청	신항	남방파제(2-1공구)	전면	'22. 03.	안전사고 위험구역
18		울산청	신항	남방파제(2-2공구)	전면	'24. 01.	안전사고 위험구역
19		울산청	신항	북항방파호안	전면	'22. 03.	안전사고 위험구역
20		울산청	신항	남항 방파호안	전면	'22. 06.	안전사고 위험구역
21		울산청	울산항	동방파제	전면	'22. 09.	안전사고 위험구역
22	전남	여수청	거문도항	동도방파제	전면	'21. 02.	안전사고 위험구역
23		여수청	여수산북항	경계울타리 내	전면	'22. 09.	안전사고 위험구역

연번	지역	관리청	항만	시설명	범위	지정일	지정사유
24	충남	대산청	대산항	서방파제	부분	'22. 02	안전사고 위험구역
25	충남	대산청	대산항	북방파제	전면	'22. 02	안전사고 위험구역
26	경기	평택청	평택등전항	외곽호안(2공구) 내항 가오(2단계) 내항 가오(1단계)	전면	'21. 06	안전사고 위험구역
27	인천	인천청	연평도항	남방파제	전면	'21. 12	안전사고 위험구역
28		인천청	연평도항	동방파제	전면	'21. 12	안전사고 위험구역
29		인천청	용기포항	서방파제	전면	'21. 12	안전사고 위험구역
30		인천청	용기포항	동방파제	전면	'21. 12	안전사고 위험구역
31		인천청	인천항	인천신항고	부분	'21. 12	안전사고 위험구역
32		인천청	인천항	바다쉼터	부분	'21. 12	안전사고 위험구역
33		인천청	인천항	신항 투기장	전면	'23. 04	안전사고 위험구역

- (지자체) 출입통제구역 지정현황(13개소)

연번	지역	관리청	항만	시설명	범위	지정일	지정사유
1	전남	전남도	완도항	남방파제	전면	'20. 10.	안전사고 위험구역
2		전남도	완도항	어항구 남방파제	전면	'20. 10.	안전사고 위험구역
3		전남도	녹동신항	방파제	전면	'20. 10.	안전사고 위험구역
4		전남도	나로도항	서방파제	전면	'20. 10.	안전사고 위험구역
5	충남	충남도	대천항	서방파제	부분	'21. 02	안전사고 위험구역
6	경북	경북도	강구항	북방파제	부분	'22. 01.	안전사고 위험구역
7		경북도	강구항	해파랑공원	부분	'22. 01.	안전사고 위험구역
8		경북도	구룡포항	북방파제	부분	'22. 01.	안전사고 위험구역
9		경북도	구룡포항	남방파제	부분	'22. 01.	안전사고 위험구역
10	경남	경남도	옥포항	북방파제	전면	'21. 03.	안전사고 위험구역
11		경남도	옥포항	남방파제	전면	'21. 03.	안전사고 위험구역
12		경남도	삼천포항	신항(진남)방파제	전면	'22. 06.	안전사고 위험구역
13		부산시	부산남항	남항 내 TTP	부분	'21. 11.	안전사고 위험구역

항만구역 내 출입통제구역 지정·운영 매뉴얼

2024년 1월 발행

(발행기관)

해양수산부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항만기술안전과

<http://www.mof.go.kr> ☎ 044-200-5955

(관련단체)

한국항만협회

07271 서울시 영등포구 양산로 53(양평동 3가)

월드메르디앙 비즈센터 707호

<http://koreaports.or.kr> ☎ 02-2165-0144